

또 시행령 바뀌...경찰 수사종결권 줄이고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수사준칙 입법 예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재수사요청 미이행시 검찰 송치

불송치 사건 검찰 취급 가능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횡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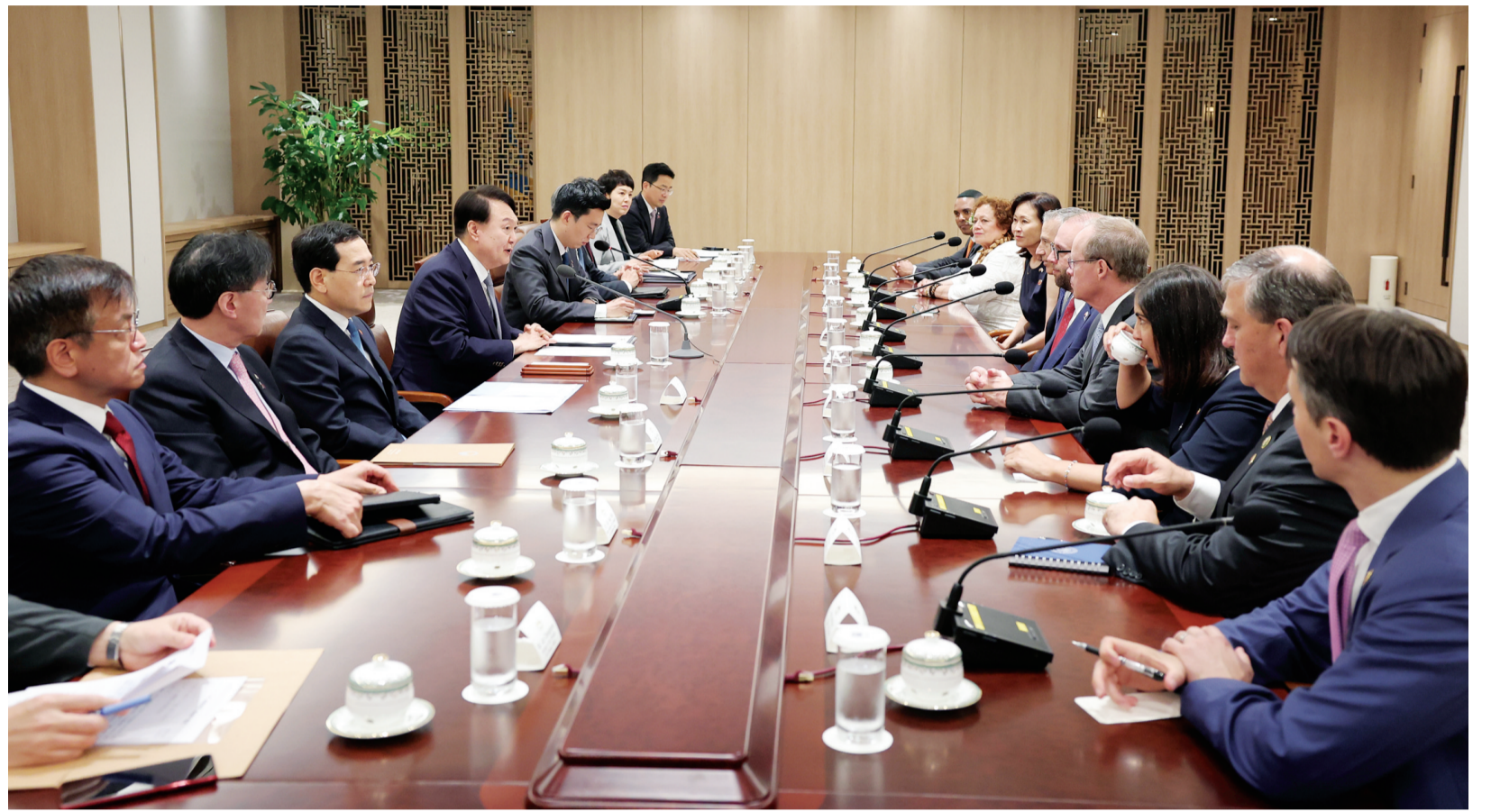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러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의 고발인 이익신장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추천하면 지명"…기존입장 재확인

野 요구 반응...국회 논의는 공전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인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 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부합하게 특별감찰관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상 독립 기관으로서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정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尹 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

리얼미터...국힘 36.3%·민주 44.3%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하락한 59.5%로,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2%p↑), 서울(2.3%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p↑), 대구·경북(5.8%p↑), 70대 이상(2.9%p↑), 보수층(2.6%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

한편,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감사원, '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장하성·김현미 등 수사 요청 방침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통계 왜곡과 관련한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로 왜곡·발표됐다고 사실상 결론냈다.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장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부직 인사들을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통계기관이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정

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추후 황 전 수석, 홍 전 수석, 두 전직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이 집값, 소득, 고용 통계를 공표하기 전 청와대에 발표 시기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